

서울~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정 지자체의 의견만 반영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겨레, 7.4) >

◆ ‘김건희 일가’ 고속도로 특혜 의혹... 하남시 요청 묵살 드러나

□ 하남시의 요청은 묵살하고, 양평군에만 직원을 보내 협의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국토교통부는 서울시, 하남시와 서울-양평 고속도로 시점부 노선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- 하남시는 고속도로 시점부의 강동대로 직결을 요청한 반면, 서울시는 하남시 요청안에 반대하였습니다.

- 연결도로의 교통 정체 심화, 강동대로 확장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*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한 사항입니다.

* 강동대로 8차로 이상의 확장이 불가피하여 보상비, 공사비 등 1.5조원 이상 필요

○ 지난 5월 8일 공개한 노선의 시점은 「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출입시설 간 최소 기준을 만족합니다.

* 고속도로 나들목 간격은 최소 2km, 최대 30km를 원칙으로 하나 도시지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 간격 1km 가능(감일JCT-서하남IC 간 간격 1km)

○ 또한,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국토교통부 직원이 특정 지자체에만 방문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습니다.

□ 앞으로 서울~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, 하남시, 광주시, 양평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명희 (044-201-3875)
		담당자	서기관	이종현 (044-201-3904)